

독일, 「인프라 미래 법」 의결을 통해 핵심 교통 인프라 공익 우선 지정 및 인허가 절차 개선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독일 연방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독일 연방하원은 「인프라 미래 법」을 의결해 핵심 교통 인프라를 공익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

- 법안의 핵심은 여러 교통수단을 공익 우선 대상으로 확대하고, 주요 인프라 사업을 인허가 심사시 고려하도록 규정
 - 병목 구간 해소 사업과 핵심 철도사업, 아우토반 신설, 교량·터널 교체·신설, 화물차 주차장, 공항·항만 등을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
 - 정부는 공공·군사 안전과 공급·교통안전, 경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법률에 명시하고, 이를 인허가 심사 시 독립적인 공익 판단 요소로 규정
- 이번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도로 분야의 우선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넓히는 등 핵심 조항을 강화
 - 확정·우선 수요 대상인 연방국도 4차로 확장 사업 68건을 최우선 공익 대상에 추가해 우선 처리 대상 사업을 확대
 - 길이 1,500m 이하 교량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 면제 기준의 길이 제한을 폐지하고 연방행정법원 관할을 확대해 재판 절차를 단축

□ 정부는 계획·인허가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중복되는 심사 절차를 정비해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인허가 기간을 단축

- 계획·확정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공간 적합성 심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절차 중복을 줄이고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
 - 연방간선도로·수로·연방철도·트램 사업에 적용되던 공간 적합성 심사는 해당 주가 4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폐지
 - 연방교통부는 절차의 디지털화와 BIM·AI 기반 이의 처리 등을 통해 개별 절차단계를 최대 30%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
- 자연·환경보호 분야는 보상 수단을 유연화하되 기존 보호 기준은 유지하면서 절차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
 - 불가피한 자연·경관 훼손에 대한 보상은 현장 복원, 대체 조성, 대체금 납부를 동등한 보상 수단으로 인정
 - 연방교통부는 환경보호 기준은 유지하면서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

※ 출처 : 독일 연방교통부(2026.06.26), Infopapier zum Infrastruktur-Zukunftsgesetz